

연구총서 2000-19

##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

배 정 호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국제환경의 대변화속에서 한반도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질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영시대’를 개막하여야 하는 역사적 시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하는 난관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는 필자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도록 한다. 역사의 전환기일수록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한 것이다.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에 관해 이론화를 시도하였고, 나아가 한국의 국가목표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편적 공통성뿐 아니라 민족모순의 극복이라는 특수성도 내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구상하였고, 포괄적 안보전략을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포괄적 안보논리의 관점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해 분석하였고, 아울러 한국은 ①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② 통일후에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의 불식 및 신뢰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6자회담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다.

## 1.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본서에서는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한 국가가 전략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design)이다”고 개념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 추진에 있어서는 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②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국가목표의 설정, ③ 국력 및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④ 한정된 가용자원을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에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⑤ 정치지도자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 및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 및 물적 환경에 대해 분석한 뒤,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가목표에는 보편적인 공통성 이외에 민족모순의 극복이라는 특수성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의 국가전략은 물적 환경 및 국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극복, 번영과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국가전략은 선택의 문제로서 정권에 따라 또는 정치지도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성향을 지니지만,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 및 민족사 차원의 시대적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권이 나 어느 정치지도자이든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본문의 <표 3> 참조)

아울러, 그와 같은 한국의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지향성을 가질 것이다.

첫째, 21세기를 주도하는 추동력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이므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에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영을 통한 한민족의 도약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지전략적·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조건, 한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 **나.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안전보장의 일반적인 개념은 가치·목표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본서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목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 및 국가목표를 추구해 가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해결과 더불어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는 데 위

협요인 및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반도에 유리한 안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국의 힘을 증강시키는 자조노력,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국제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본문의 <표 4> 참조)

## 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추진전략

한반도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지향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역내의 불안정성·불확실성·유동성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능동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포괄안보전략의 맥락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의 현황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Track 2 또는 Track 1.5 형태의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가 있고, 한국이 주창한 ‘동북아 다자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가 Track 1 형태로 추진된 바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rack 2 형태의 ‘동북아 6자회담’이 논의·추진중에 있다.

요컨대, 동북아지역에서 효과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은 역내국가들의 주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과 북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① 동북아 지역차원과 ② 한반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도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유동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역내 유동성의 증대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안보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안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도 군사문제뿐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마약, 테러 등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문제들은 국제적 성



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내 포괄적 안보문제들을 논의하고, 정책조정과 협력을 위한 장(場)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필요성과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시대에 결성된 양자간 동맹만이 있다. 즉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물론, 예방적인 다자안보협력 레짐도 없다. 그러므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예방외교의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역내 양자간 동맹관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예방외교의 활동을 통하여 역내 불확실성을 감소·제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조건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과정의 평화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 **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전략**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국가들간 위협인식의 차이, 동질적 가치의 결여에 따른 다자간 협력 전통의 결여,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제도적 상호의존의 발달 미비, 미·일·중·러간의 경쟁심 상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저해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는 유동성의 심화와 더불어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또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레짐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도 중국, 북한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본문의 <표 6> 참조)

그러므로, 한국은 ①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② 통일후에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의 불식 및 신뢰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꾸준히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6자회담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기존의 양자동맹과의 상호보완적 전략
- ② 단계별·포괄적 전략
- ③ 'Track 1'과 'Track 2'의 병행전략
- ④ 4자회담과의 분리 및 상호보완적 전략
- ⑤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3
1. 국가전략 .....	3
가. 국가전략의 개념과 정의 .....	3
나. 국가전략의 구상과 추진 .....	5
다. 국가전략의 유형화 .....	13
2. 안보전략 .....	15
가. 안보전략의 개념과 특징 .....	15
나.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	17
다. 안보협력의 유형과 특징 .....	20
III. 한국의 국가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	27
1. 21세기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전략 .....	27
가. 한반도와 국내외 환경 .....	27
나. 한국의 국가전략 .....	31
2.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	34
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	34
나.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의 특징 .....	36
다.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과 남북교류 .....	41
IV.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추진전략 .....	44
1.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	44

가. 동북아협력대화(NEACD) .....	44
나. 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NEASeD) .....	46
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 .....	47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 .....	47
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역할 .....	49
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국 입장 .....	51
가. 미국 .....	51
나. 일본 .....	52
다. 중국 .....	53
라. 러시아 .....	54
마. 북한 .....	56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전략 .....	57
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과 6자회담 .....	57
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추진방향과 6자회담의 추진전략 .....	60
V. 결 론 .....	67
참고문헌 .....	71

## 표·그림 목차

<표 1> 국가전략의 유형구분 .....	15
<표 2> 안보전략의 유형구분 .....	17
<표 3> 한국의 국가전략과 부문별 전략 .....	32
<표 4>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의 다차원적 구도 .....	39
<표 5>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안보관계 .....	40
<표 6> 동북아 6자회담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 .....	59
<그림 1> 환경과 국가전략과 정책 .....	12
<그림 2> 국가안보전략과 대북·통일전략 .....	36

## I. 문제제기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국제환경의 대변화속에서 한반도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20세기는 한민족의 아픔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해방과 더불어 또다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분단의 아픔은 21세기를 맞이하고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더불어 민족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이기도 하다.<sup>1)</sup>

그러므로, 이제 주요한 역사적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질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영시대’을 개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하는 난관들도 적지 않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통일의 개연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아울러 동북아 국제질서도 고도로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유동성은 새삼스럽게 필자로 하여금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한다. 역사의 전환기일수록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환경속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소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더 중요하다.

---

1)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제36차 국내학술회의 논문집, 2000. 5. 30).

##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에 관해 이론화를 시도하였고, 나아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에 관한 구상과 함께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하였으며, 포괄적 안보논리의 관점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6자회담을 위한 전략개발을 시도하였다.

즉, 본서의 II장에서는 국가전략의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의 구상과 추진, 국가전략의 유형화 등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나아가 안보전략의 개념정의와 더불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전략, 안보협력의 유형과 특징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한국의 국가목표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편적 공통성뿐 아니라 민족모순의 극복이라는 특수성도 내포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아래에서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구상하였고, 아울러 포괄적 안보전략을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자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다자주의적 접근을 병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사전예방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해 분석·연구하였다

## II.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1. 국가전략

#### 가. 국가전략의 개념과 정의

전략은 ‘기술’(art), ‘학’(science) 또는 ‘학술’(art and science)로 정의되기도 하고, 또 ‘목표달성을 위한 지혜’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기도 하는데, 그 본질은 ‘기계’(奇計), ‘기략’(奇略)이다.<sup>2)</sup>

그와 같은 전략의 어원은 동양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지혜 또는 책략(策略)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고, 서양에서는 그리스어의 ‘장군’(strategos)’이라는 말로부터 파생한 ‘장군의 임무’(strategos) 또는 ‘모략이나 계책’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전략은 프랑스 대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근대적인 군사전략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군대의 운용 및 군사작전 계획 등을 포괄하는 군사전략을 의미하게 되었다.<sup>3)</sup>

그와 같은 전략의 의미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한층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대전을 계기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략은 좁은 의미의 군사전략을 넘어서서 전시 및 평시를 망라한 국가안보전략을 의미하는 대전략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

2) 岡崎久彦, 『戰略的思考とは何か』(東京: 中央公論社, 1983).

3)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87).



#### 4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다.<sup>4)</sup> 즉, 당시의 대전략은 전시 및 평시에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내외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미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략의 고도개념인 대전략의 사용과 더불어 전략은 전시 및 평시를 망라한 국가안보전략의 개념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sup>5)</sup> Liddel Hart는 정치전략, 군사전략 등을 광범하게 포괄하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으로서 대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략을 군사전략과 대전략으로 구분하였다.<sup>6)</sup>

이처럼 시대적 특성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전략의 개념 및 범위도 변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전략은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안보전략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개념 그 자체가 매우 다의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사전략 또는 안보전략과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한 국가가

---

4) 국가전략은 군사전략과 구분되어 대전략 또는 고급전략(high strategy)으로 불려졌는데, 강대국의 경우 국가전략의 개념으로서 대전략을 사용하였다.

5) Edward Mead Earle,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N.J., 1943), p. viii.

“strategy is the art of controlling and utilizing the resources of a nation - or a coalition of nations - including its armed forces, to the end that its vital interests shall be effectively promoted and secured against enemies, actual, potential, or merely presumed. The highest type of strategy - sometimes called grand strategy - is that which so integrates the policies and armaments of the nation that the resort to war is either rendered unnecessary or is undertaken with the maximum chance of victory.”

6) Basil H. Liddel Hart, *Strategy* (New York: Signet, 1974).

전략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design)이라고 개념정의를 한다.<sup>7)</sup>

이와 같은 국가전략의 개념은 광범하고 종합적이며, 다층적·다차원적 구성과 함께 실천 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전략은 개별적 정책영역들에서의 실천 지향적 전략들을 포괄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종합적 전략이며, 동기적 차원, 인식적 차원, 운영적 및 가동적 차원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다층적·다차원적 전략인 것이다.<sup>8)</sup>

#### 나. 국가전략의 구상과 추진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②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국가목표의 설정, ③ 국력 및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④ 한정된 가용자원을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에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⑤ 정치지도자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7) 裴廷鎬, 『國際環境の變化と日本の對應 - 大平政權から中曾根政權までにおける日本の總合安全保障と國家戰略 -』(東京大學 博士學位 論文, 1991).

8) 세종연구소, “제1장 21세기를 향한 국가전략”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전략』(서울: 세종연구소, 1996). 국가전략은 세 차원 즉 ① 그 나라가 추구할 목표와 이익의 파악과 우선 순위라는 동기적 차원, ② 주위환경에 대한 평가와 위협, 방해물, 또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인식적 차원, ③ 주어진 환경속에서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 동원할 수 있는 운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 질 때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등이 중요하다.

(1) 환경과 국가전략

(가) 물적 환경

국가경영과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영역(interface)으로서 물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국제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 및 국내환경(domestic environment)을 들 수 있다.

물적 환경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물적 환경은 국제환경이나 국내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아울러 국가전략의 수립 및 전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물적 환경은 산업혁명기에 그 영향력이 큰데, 오늘날의 첨단기술은 '21세기는 첨단기술의 패권이 곧 세계패권으로 직결된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 군사,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아울러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생용 및 군사용의 양용성(dual use)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하이테크 전쟁의 전개와 더불어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고, 아울러 새로운 산업혁명인 지식정보혁명이 야기되도록 하였다. 지식정보혁명의 전개는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영역, 국제관계 영역 등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sup>10)</sup>

---

9) Yasusuke Murakami, "The Japanese Model of Political Economy," Kozo Yamamura & Yasukichi Yasuba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나) 국제환경 및 국내환경

국제환경이나 국내환경은 사회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sup>11)</sup> 국제사회는 다양한 행위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위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제환경은 국제역학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제환경에 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도 하는데, 그와 더불어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환경은 국가의 전략수립과 전략수행에 직접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목표의 설정 및 국가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발휘, 국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 사회·정치적 결속도 등은 국가전략의 수립 및 전개에 직접적이고 경우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인식할 경우,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속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역사—세계사, 민족사, 문명사—는 국가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목표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전략의 수립에 전략 입안자의 역사의식이 투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 (2)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정치지도자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이상적이면서도 실현 지향적인 것인데,<sup>12)</sup> 넓은 의미에서

10) 배정호,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 『戰略研究』 第4輯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2).

11) Yasusuke Murakami, “The Japanese Model of Political Economy.”

보면 대체로 ① 국가의 자기보존, ② 국가의 번영과 발전, ③ 국위선양, ④ 국민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체제의 보존 및 신장, ⑤ 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및 국제질서의 창출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sup>13)</sup>

그리고, 그와 같은 국가이익의 우선 순위(priority)는 일반적으로 ①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②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③ 중요한 이익(major interest), ④ 지엽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분류된다.<sup>14)</sup> 또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이익이 다른 국가이익과 상충될 경우,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이익의 우선 순위,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이익,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장기적인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들의 바람직한 국가이익관의 정립은 국가전략의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대체로 정치지도자들은 단기적 국가이익에 도취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광범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목표(national objective)는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이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

12) 이 국익의 개념은 Joseph Frankel의 세 수준의 개념중에서 원망(aspiration)수준의 국익개념에 가깝다. Joseph Frankel, *Contemporary International Theory and Behavior of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Chapter 5.

13)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4년 봄·여름);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5).

14)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위하여 선정된 국가목표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국가 활동의 가장 폭넓은 기반이 되는데, 이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나타내며 국가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가목표는 슬로건이나 캐치 프레이저처럼 상징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개념 제시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이익이나 국가목표는 국가의 특성이나 입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한 나라의 국가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의 실현을 추구하는 국가전략은 선택의 문제로서 정권의 특성에 따라 또는 정치지도자의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sup>16)</sup>

### (3) 국가전략의 수행능력과 주요 기반

전략구상을 할 경우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고려하여야 할 것은 환경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행위주체의 전략 수행능력이다.

따라서, 국가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주체인 국가의 전략 수행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전략 수행능력은 전략의 행위주체인 국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서 구성되는 복합체이다. 힘(power)이 행위주체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전략 수행능력은 국력(national power)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국가의 전

15) W. Lippmann and C. V. Crabb, Jr.,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Nuclear Age*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 (세종연구소, 1995년 봄·여름).

16)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략수행능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국력의 양·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국력을 국가전략의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생각할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actual power)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latent power)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카(E. H. Carr)는 국력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로서 군사력(military power), 경제력(economic power), 대내외적 여론의 유도 및 형성을 가능케 하는 여론지배력(power over opinion)을 들었는데,<sup>17)</sup> 이는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주요 기반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주요 기반은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여론지배력, 문화력 등인데, 이들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제력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개발력이나 투자활동을 받쳐 주는 금융력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 정보력 즉 정보의 수집·분석·유포능력은 군사력, 경제력, 여론지배력, 문화력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력 및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기반으로 군사력이 가장 중시되었지만, 20세기 말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력 및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기반으로 경제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가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관해 언급하면, 19세기 제국주의의 시대에는 군사력을 경제력으로 전화(轉化)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지만, 민족주의(nationalism)가 고조된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렵다. 오히려 힘의 전화는 경제력

---

17) 카(E. H. Carr)는 국력의 구성요소로서 군사력, 경제력, 여론지배력을 들고, 군사력을 가장 중시했다. Edward Hallet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The Macmillan & Co. Ltd., 1939) Chapter 8.

을 군사력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보다 쉬운 편이다. 즉, 국력의 구성 요소로서, 또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기반으로 경제력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군사력은 국력의 구성요소로서, 또 국가전략 수행능력의 기반으로 군사력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어느 한 분야에 일방적으로 특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한 분야에 특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 분야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군사력에 특화한 소련이 경제적으로 침화되고, 군사력으로도 약화되어 마침내 분열된 것은 좋은 예이다. 반면, 경제력에 너무 일방적으로 특화하게 되면, 군사적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대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여론지배력, 문화력간의 균형이 잡힌 국력과 더불어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여론지배력, 문화력간에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행에는 국력뿐 아니라 정부 및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재정력, 목적의식 및 의지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행위주체의 실천적인 활동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및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재정력, 목적의식 및 의지 등은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 (4) 국가전략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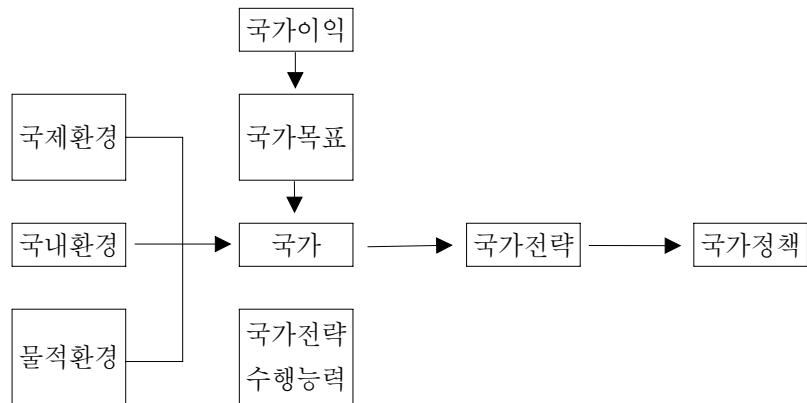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전략에 대하여 한 국가가 전략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design)이라고 개념정의 를 한다면, 이와 같은 국가전략에 근거하여 국가행위가 구현되는 실 천이 국가정책이다. 즉 국가전략은 국가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 위지침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가전략은 국가정책을 유도하며, 국 가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환경과 국가,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와 국가전략, 국가정책 등을 정리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1> 환경과 국가전략과 정책



#### 다. 국가전략의 유형화

국가전략은 차원과 범위, 기간, 방법, 대응자세 등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국가전략은 그 차원 및 범위에 따라 대전략(grand strategy)과 부문별 전략들로 구분될 수 있다. 대전략은 세계상황의 흐름 및 변화(global context and change)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가·대응하면서 국익 및 국가목표의 달성을 효율적으로 꾀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대전략이 대내외적 차원에서 수행될 경우, 대외적 차원에서는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과 주요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이 전개되는 것이다. 국력과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대전략은 대체로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강대국(great power)의 국가전략에 한정될 수 있다. 대외적 영향력이 비교적 좁게 한정되어 있는 중소국가의 경우는 세계질서의 형성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세계전략을 자주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국가도 국가능력상 세계질서의 형성 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전략은 전개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상대적 입지의 변화에 따라 제한된 여건 또는 제약의 틀내에서 자국의 이익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인 대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략 또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틀내에서 각 부문별로 전개되는 개별전략은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능별로 전개되며, 아울러 상승 효과(synergetic effect)를 위하여 부문별 전략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기도 한다.

둘째, 전략은 전략이 전개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long-term), 중기

(mid-term), 단기(short-term)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국익 및 국가목표가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질 경우, 국가전략도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셋째, 전략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직접 접근(direct approach)과 간접 접근(indirect approach)의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전략은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구분에 따라 국가주도전략(state-led strategy) 또는 국가유도전략(state-induced strategy)으로 특징지워진다. 국가주도전략은 국가가 전략수행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직접 전략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국가유도전략은 관련이 있는 비정부주체의 참가를 유도하고 나아가 참가자의 활동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넷째, 전략은 그 대응태세에 따라 수동적 전략(reactive strategy)과 능동적(active strategy)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전략은 그 기능에 따라 사후 대응적 전략과 사전 예방적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후 대응적 전략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①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그 불리한 영향을 극소화시키고, 아울러 ② 유리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사전 예방적 전략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상황변화를 예측할 때, ① 그러한 변화로부터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② 그 변화 자체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국가전략은 차원 및 범위, 기간, 방법, 대응태세, 기능 등에 따라 유형구분이 가능한 것이다.(〈표 1〉 참조)

&lt;표 1&gt; 국가전략의 유형구분

기 준	국가전략의 여러 유형
차원 및 범위	대전략 부문별 전략
기 간	장기전략, 중기전략, 단기전략
방 법	직접 접근의 전략: 국가주도전략 간접 접근의 전략: 국가유도전략
대 응 태 세	수동적 전략, 능동적 전략
기 능	사전 대응적 전략 사전 예방적 전략

## 2. 안보전략

### 가. 안보전략의 개념과 특징

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안전보장의 일반적인 개념은 가치·목표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일반적인 개념도 ‘국가가 국내 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목표를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장의 개념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 즉, ① 가치·목표, ② 위협, ③ 안보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보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도 ① 핵심적 가치 및 궁극적 목표에 관한 우선 순위를 평가·설정함과 더불어 ② 위협이나 위기의 내용에 관해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③ 적절하고도 유효한 안보수단을 모색하

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안보전략의 개념과 관련, 본서에서는 ‘국가가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목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 및 국가목표를 추구해 가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개념정의를 한다.<sup>18)</sup>

이와 같은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특성, 국가전략의 양상,<sup>19)</sup>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평가, 안보수단의 확보, 등에 따라 전략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안보전략도 국가전략과 마찬가지로 차원 및 범위, 기간, 방법, 대응태세, 기능 등에 따라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은 대응태세에 따라 수동적 안보전략과 능동적 안보전략으로 구분되는데, 수동적 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사후 대응적 전략이고, 능동적 안보전략은 사전예방전략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전략이다. 즉 수동적 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그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상대편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고, 능동적 안보전략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관계나 긴장상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18) 裴廷鎬, 『國際環境の變化と日本の對應 - 大平政權から中曾根政權までにおける日本の總合安全保障と國家戰略 -』.

19)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전략의 틀속에서 전개되므로 국가전략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군사’전략, ‘군사-정치’전략에서는 전통적인 군사안전보장을 중시하지만, ‘통상’전략이나 ‘경제-정치’전략에서는 군사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면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포괄적 안전보장을 지향한다.

노력하며, 아울러 우호관계의 유지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표 2> 안보전략의 유형구분

기 준	안보전략의 여러유형
차원 및 범위	대전략 부문별 안보전략
기 간	장기전략, 중기전략, 단기전략
방 법	직접 접근의 안보전략 간접 접근의 안보전략
대 응 태 세	수동적 안보전략, 능동적 안보전략
기 능	사전 예방적 안보전략 사후 대처적 안보전략

#### 나.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국가의 영토적, 주권적, 국민적 성격이 존속하는 한, 정치의 속성으로서의 전쟁의 본질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아울러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21세기 국가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 (1) 국제환경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

###### (가)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인하여

해체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신 국제질서의 형성 및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역시 그 힘(power)에 있어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즉, 세계 GNP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된 일본, 중국, 독일 등이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성의 증대, 지역주의의 대두 등과 더불어 다원화되고 있고, 미국 또한 서방국가들의 일정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없이 주요한 문제에 단독으로 개입하여 행동을 펼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 (나) 경제력 및 경제관계의 비중 증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는 경제력의 침하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경제력은 국가의 생존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동력으로 하는 세계화의 전개와 더불어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게 되면서, 국제관계에서는 경제관계의 비중이 한층 커지고 있다. 경제력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됨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힘(power)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즉,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더불어 경제력이 군사력 이상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다)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산됨

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경제, 기술, 환경, 자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고, 또 세계질서의 다원화, 지역주의 대두,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등은 정치·안보의 상호의존성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상호의존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형성과 구축·유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라) 첨단기술의 혁신과 하이테크 전쟁

하이테크 전쟁으로 불려졌던 걸프전에서 보여주었듯이 첨단기술은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와 같은 첨단기술은 민생용 및 군사용의 양용성(dual use)으로 인하여 경제, 군사,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21세기는 첨단기술의 패권이 곧 세계패권으로 직결된다고 일컬어질 정도이고, 첨단기술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 제고와 더불어 기술안전보장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 (2) 새로운 안보전략의 모색

안보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 국내외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비중의 증대에 따른 힘의 개념의 변화,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첨단기술의 혁신과 하이테크 전쟁의 도래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안보환경도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군사력 게임, 부의 게임, 지식게임 및 정보게임 등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전개되면서 안보위협 요인의 다양화와 더불어 안보영역 및 대상도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지식 및 정보 영역, 환경 등의 생태계 영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국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더불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안전보장을 추구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제적 성향을 지닌 안보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의 패러다임 및 전략적 사고, 안보의 개념 등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안보개념으로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비롯하여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sup>20)</sup> 등이 제시되고 있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21)</sup>

#### 다. 안보협력의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에서 지역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안보협력의 유형에는 동

20) 예방외교는 분쟁의 방지 또는 분쟁의 발생시 확산방지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는 분쟁의 발생 이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외교(crisis management diplomacy)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July 17, 1992).

21) 국가안보전략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 같이 국가의 특성, 국가전략의 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패전후 일본은 '통상'형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하고 경제대국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므로, 이미 냉전시대에 총합안보라는 포괄적 안보전략을 추구하였다. 배정호,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

맹, 집단안전보장, 다자간 안보협력 등이 있다.

### (1) 동맹(alliance)

동맹은 특정한 위협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힘을 규합하는 집단방위로서, 세력균형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어온 방법의 하나이다. 동맹은 지역 안보협력의 형태중 국가간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특별한 형태인데, 동맹의 개념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공동 안보를 위하여 무기한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결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동맹관계는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위협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동맹자간의 동질성·호혜성·균등성이 높을 때 한층 공고해진다. 즉 동맹관계는 동맹자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더 공고할 가능성이 높고, 또 동맹자간의 상호 혜택이 있을 때, 한층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아울러 세력이 균등한 행위자로 구성된 동맹이 세력이 불균등한 행위자로 구성된 동맹보다 더 공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동맹관계가 형성될 경우, 약소국은 동맹관계의 공고화를 위하여 강대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동맹국내 약소한 참여국들은 안보를 담보로 주도국의 영향력아래 놓이게 되고 대외적 자율성을 제약받을 수 있다. 즉 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동맹관계는 둘 이상의 독립국가가 참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동맹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양자동맹과 다자동맹으로 구분된다. 양자동맹으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의 사례를 들 수 있고, 다자동맹으

로는 NATO나 Warsaw pac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동맹이 외부의 특정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힘을 규합하는 안보협력인 데 비하여, 집단안전보장은 가상의 특정한 위협이나 적을 상정하지 않고,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독립국가들이 안보 제휴를 통하여 불특정한 참여국에 의한 평화파괴 행위에 대처하는 안보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안전보장은 한 국가의 안보를 특정 국가나 국가집단을 겨냥한 동맹조약에 의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참여국이 무력으로 위협을 받거나 무력공격을 받게 될 경우, 다른 모든 참여국들은 자신이 직접 무력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침략자 또는 평화파괴자에 대해 대항함으로써 참여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안전보장과 동맹은 강제력에 의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집단방위동맹(collective self-defence alliance) 즉 양자 및 다자 동맹이 특정한 비참여국으로부터 참여국을 보호하는 데 비하여, 집단안전보장은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참여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은 제1차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의해 처음으로 구현되었고, 현재는 국제연맹의 약점이었던 조직된 강제력을 보완한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 (3) 다자간 안보협력

#### (가) 다자간 안보협력과 협력안보

기존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을 보면, 대체로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결성된 것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인 유럽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나 유럽안보협력기구(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도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결성되었다.<sup>22)</sup>

협력안보는 대립구조가 불명확하고 안보적 불안정성이 잠재하는 지역에서 분쟁의 발생 소지 및 불안요인을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적 성향이 강한 개념이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역내 국가간 안보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안보대화의 관습화 및 제도화, 신뢰양성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적 활용, 예방외교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안보협력 레짐의 형성을 추구

22) 유럽에서는 1975년에 정치, 경제, 이념이 다른 동·서구 국가들 즉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35개국이 모여 다자간 안보협력회의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탈 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CSCE는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로 기능을 강화하다가, 1995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55개국이 참여하는 대조적으로 확대·발전되었다. 즉, CSCE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되어 재탄생된 것이다.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1호 (1994); 홍기준 “안보레짐의 형성: CSCE/OSCE의 사례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8집 1호 1(1998).

한다. 말하자면, 협력안보는 특정한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① 불특정의 잠재적 위협이 현재화(顯在化)하여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는 것을 정치·군사적 신뢰의 축적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며, ③ 군사적 충돌의 발발 시에는 그 규모를 한정시킬 수 있는 틀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협력안보가 군사적 침략이나 분쟁의 발발한 후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분쟁발생 이후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장치로서 동맹이나 집단안전보장을 필요로 한다. 즉 협력안보는 동맹이나 집단안전보장 처럼 강제력에 의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대결안보(confrontational security)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쟁억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sup>23)</sup>

실제로 유럽에서도 집단방위를 피하는 다자동맹인 NATO가 핵심적인 안전보장 장치이고, 협력안보의 틀인 OSCE는 보완적인 안전보장 장치이다.

23) 다자간 안보협력의 군사분야인 군비통제(arms control)와 정치분야인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은 개념상 집단동맹으로부터 집단안전보장, 협력안보 전반에 걸쳐 기능하나, 군비통제는 대결영역이 협력영역보다 클 때부터 중요시되며, 평화적 해결은 협력영역이 대결영역보다 우세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아울러 군비통제는 군사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해결은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여기서 정치적 안정이란 정치적으로 무력분쟁(armed conflict)을 일으키는 긴장(tension)이나 동기(incentive)가 없거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국가간 통용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원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제23집 (1998); Heinz Velschera, *Instrument of Cooperative security in the CSCE Framework—Confidence Building Measures, Emergency and Conflict Prevention* (Vienna: CSCE Secretariat, 1994).

## (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역할

협력안보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참여국의 공동 관심사의 개발 및 논의를 통하여 역내 국가간의 대화의 관습화를 도모하고, 공통규범의 공유를 추구하며, 국가 행동양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분쟁의 사전예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CSCE 및 OSCE의 경험을 참고해 보면,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sup>24)</sup>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안보영역 즉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테러, 마약, 첨단기술 등 다양한 안보영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그와 같은 포괄적 협의를 통하여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또 역내 국가간 안보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안보정책과제를 개발하며, 공동의 안보영역이 확대되도록 한다.

셋째, 안보의 상호의존 및 상호신뢰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의존과 통합이 촉진·강화되도록 한다.

넷째,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군사정보의 교환 및 군 인사의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군사적 신뢰가 축적되도록 한다.

다섯째, 그와 같은 운용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구조적 군비통제의

24)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문수연 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력체와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실현이 추구되도록 한다.

여섯째,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의 수행을 위하여 사실 조사 활동(fact finding)이 시행되도록 한다.

요컨대, 국제레짐은 국가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sup>25)</sup>의 기능을 하므로,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참가국들이 주어진 안보영역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참가국들의 기대를 조정함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25)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Ⅲ. 한국의 국가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 1. 21세기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전략

본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한 국가가 전략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design)이다”라고 개념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②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국가목표의 설정, ③ 국력 및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④ 한정된 가용자원을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에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⑤ 정치지도자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 및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 및 물적 환경에 대해 분석한 뒤,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 가. 한반도와 국내외 환경

한국의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는 물적



환경과 국제환경, 국내환경 등이 있다.

(1) 물질 환경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의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첨단기술의 전략적 가치의 제고, 정보혁명에 따른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 등이다. 특히 지식정보화는 정보혁명과 지식혁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으로 21세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혁명적인 변화이고, 아울러 21세기의 국가경쟁력, 생활양식, 사고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다.<sup>26)</sup> 지식정보화는 경제영역에서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서 산업의 급속한 재편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증진시키고 있고, 정치사회영역에서는 골드칼라(지식전문가, 지식노동자, 인지 엘리트, 상징분석가 등)를 새 시대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간영역에서는 ‘지리의 종말’(end of geography)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식정보화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화의 과정은 혁신경쟁과 속도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무한경쟁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는 한반도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

26) 임혁백·안석교 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나남출판, 2000).

(2) 국제환경

국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의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냉전의 효과 및 영향, 세계화의 전개 등이고,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계기로 한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 등이다.

냉전적 양극체제의 해체에 따른 탈냉전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환경은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경제력 및 경제관계의 비중 증대,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의 약화, 국가이익에 기초한 경쟁과 협력의 강화 등의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동력으로 하는 세계화는 생산, 기술, 노동, 자본으로 하여금 글로벌 정체성을 갖도록 요구하면서 세계경제를 통합시키고 있고,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는 기존의 세계경제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행위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 경제’, ‘경쟁의 세계화’, ‘지구촌 시대의 도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의 혁명적 발전으로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글로벌 행위자의 양산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국가중심적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정책주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환경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의 전개와 더불어 역내 유동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경제분야에서

---

27) 위의 책.

는 ‘경쟁속의 협력’ 또는 ‘협력속의 경쟁’을 추구하면서도 ‘군사-정치’ 분야에서는 ‘경쟁과 갈등’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쟁·협력·갈등의 관계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지향한 유동성이 역내 국가들의 활발한 외교전의 전개와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동향은 대체로 유동성의 심화와 더불어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3) 국내환경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환경 차원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IMF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 및 한국자산의 해외로의 매각, 국가 생존기반으로서의 경제력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증대,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회구, 20세기의 아픈 역사적 유산인 민족모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갈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IMF사태의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 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사회 균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소위 ‘보수 대 진보’적 시각간의 갈등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대되어가고 있다.

---

28)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주변 4국들은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주요 고위급 또는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다; 북·중 정상회담(5.29), 북·러 정상회담(7. 19), 북·일 외무장관 회담(7. 26), 북·미 외무장관회담(7. 27), 모리 일본총리의 방한(5. 29),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6. 8),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6. 23), 미·일 정상회담(7. 22), 미·일 외무장관회담(7. 30),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일본 모리 총리 회담(7. 31), 오키나와 G-8정상회의(7. 21~23), 제7차 방콕 ARF(7. 27) 등.

## 나. 한국의 국가전략

어느 국가든 국가목표에는 ① 생존기반의 확보 및 공고화, ② 번영과 발전, ③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와 체제의 보존 등을 지향하는 공통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가목표에는 이와 같은 보편적인 공통성 이외에 민족모순의 극복이라는 특수성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의 국가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물질 환경 및 국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극복, 번영과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은 선택의 문제로서 정권에 따라 또는 정치지도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성향을 지니지만,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 및 민족사 차원의 시대적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치지도자이든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표 3>과 같은 다차원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즉 한국의 국가전략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1차원(global level) 및 제2차원(regional level)의 대외전략,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따른 민족모순의 해결을 위한 제3차원의 대북·통일전략, 세계화·지식정보화·민주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원의 사회 제반 여건의 발전전략, 자주 국방능력이나 국가 경쟁력<sup>29)</sup> 등의 강화를 추구하는 제5차원의 국가 생존능력의 강화전략 등 부문별로 전개될 것이며, 이들 각 부문별 전략은 국가전략의

29) 경쟁력(competitiveness)은 원래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인데, 이를 국가차원에 적용한 국가경쟁력의 일반적인 개념정의는 “복잡한 세계경제환경아래에서 국민의 지속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 향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국가의 능력”이다. 王允鍾·申東和·李炯根,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00).

전체적인 틀 속에서 총합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표 3> 한국의 국가전략과 부문별 전략

제1차원	국제환경의 전체 개선노력 (global level)	대외전략
제2차원	국제환경의 부분적 개선노력 (regional level)	
제3차원	① 남북한 공존공영 및 한반도 경영을 위한 노력 ②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대북·통일전략
제4차원	국내사회의 제반 여건 개선 노력	정치발전전략 경제발전전략 사회발전전략
제5차원	생존능력의 증강과 자조노력	자주 국방능력 강화전략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아울러, 그와 같은 한국의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지향성을 가질 것이다.

첫째, 21세기를 주도하는 추동력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이므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에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영을 통한 한민족의 도약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지전략적·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조건, 한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중추국가(hub state)의 개념은 사람, 물자, 문화가 모여서 전파되는 동태적이고 평화적인 교류국가를 의미하는데,<sup>30)</sup> 이는 동아시아의 전

략적 관문(strategic gate)으로서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 북반구의 부국과 남반부의 빈국, 기독교·불교·유교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전략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가치를 전략적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하여<sup>31)</sup> 동아시아의 ① 물류 중추, ② 정보네트워크의 중추, ③ 비즈니스·금융 중추, ④ 평화·민주주의 중추 등을 추구한다는 국가전략적 구상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sup>32)</sup>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1,200km안에 7억 인구나 6조 달러 GNP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동북아 5대 도시 즉 도쿄(東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서울, 블라디보스톡 가운데 서울은 다른 도시에 최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한반도 횡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는 경의선 및 경원선의 복원과 더불어 중국 대륙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 횡단 철도(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과 연결되게 된다.

30) 이와 같은 중추국가에 비해, 중심국가는 정태적이고 패권적인 개념이다. 한국의 인구, 국토의 크기, 경제력, 군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이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 홍철·김원배 편저,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안양: 국토연구원, 1999).

32) 21세기 대외적인 국가비전과 전략으로서 ‘아시아 중추국가’는 1999년 11월 8일 김대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제시되었다. 임혁백·안석교 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임혁백, “21세기 아시아 중추국가의 비전” (통일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발표 논문, 2000. 9. 5).

## 2.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 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안전보장의 일반적인 개념은 가치·목표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국가안보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목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 및 국가목표를 추구해 가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개념정의를 하였다. 달리 말하면,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는데 있어서 위협요인 및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가안보전략의 특징 및 구체적 내용은 시대적 상황 및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평가, 국가전략의 특성, 안보수단의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해결과 더불어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는 데 위협요인 및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다.

즉,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①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 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질서의 다원화, 국가생존기반으로서의 경제력의 비중 강화, 국제관계에서 경제관계의 비중 증대, 국제적 상호존의 증대, 첨단기술의 혁신에 따른 전쟁개념의 변화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②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미·일 대 중국’간의 느슨한 견제·대결구도속에서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증대되는 유동성의

로부터 야기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③ 남북관계차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의 전개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①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안보영역 및 대상에 대해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여야 하고, ②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미칠 수 있는 긍·부정적 영향, 즉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더불어 이를 극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능동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③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더불어 남북교류의 활성화, 남북한 상호의존의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면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의 조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전략과 대북·통일전략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포괄적 안보를 통한 굳건한 안보기반의 확립 위에 통일외교와 남북교류·협력을 수단으로 남북관계의 진진의 더불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발전 및 민족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대북·통일전략도 국가 및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나아가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의 틀 내에서 추구되는 것이다.



<그림 2> 국가안보전략과 대북·통일전략

국가발전 · 민족발전		
평 화 통 일		
통일외교	남북대화	교류 · 협력
안 보 (국 방 포 함)		

나.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의 특징

(1) 보편성: 개념, 안보영역 및 수단

포괄적 안보는 II장에서 언급되었듯이,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안보위협의 요인이 다양화되면서 안보영역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국가, 민족, 영토, 주권, 군사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의 안보가 경제력의 중시에 따른 경제안보,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안보,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안보 등으로 확대되면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포괄적 안보의 보편성을 가진 일반적 개념으로

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고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또는 사후 대처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안보”라고 정의를 한다.<sup>33)</sup>

이렇게 개념정의를 하게 되면, 한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도 보편성을 가진 안보개념이 된다. 즉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함과 더불어 안보영역 및 대상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안보수단의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안보영역을 군사적 영역에서 비군사적 영역으로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안보수단에 있어서도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적 활용을 중시함과 더불어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꾀하는 것이다.

## (2) 특수성: 민족문제와 안보

포괄적 안보전략은 스스로의 힘(power)을 증강시키는 자조노력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환경 및 국내환경의 변화를 자국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다차원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대체로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포괄적 안보전략은 3차원 즉 ① 자조노력 차원, ② 지역(regional) 차원, ③ 글로벌(global)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잠재적 위협의 존재인 동시에 공존공생의 파트너인 북한이 존재하므로, 남북관계차원의 전략이 추가되는 4차원

33) 일본에서 포괄적 안보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오히라(大平) 총리의 정책연구회가 작성한 『總合安全保障戰略』(1980)에서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여러 가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였다. 배정호,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

의 포괄적 안보전략을 추구해야 한다.(〈표 4〉 참조) 즉, 한국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반도에 유리한 안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국의 힘을 증강시키는 자조노력,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국제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은 포괄적 안보전략에 따라 군사적 수단을 통해 대북 거부력 및 억지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등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 이질성의 극소화 및 민족의식의 제고, 평화체제의 구축 등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정된 전략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나아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위협의 양상 및 안보관계도 변화할 것이다.(〈표 5〉 참조)

<표 4>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의 다차원적 구도

<p>제1차원: 자조노력 차원</p>	<p>○자국의 힘을 증강시키기 위한 자조 노력                  - 국민들의 체제신뢰성 및 응집력 강화                  - 생존을 위한 국내기반 강화                  - 국방력의 질적 증강을 통한 거부력 및 억지력 강화</p>
<p>제2차원: 남북관계 차원</p>	<p>○대북 억지력 강화                  ○남북관계 개선·통일을 위한 노력                  - 남북한 긴장완화, 공동이익의 확대 및 상호의존 심화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민족동질성 회복                  - 남북한 공통의 안보 및 협력 추구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한반도 경영시대 구현</p>
<p>제3차원: 지역차원 (regional level)</p>	<p>○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개선노력(regional level)                  - 한·미 안보체제의 내실화 및 공고화                  - 양자외교 및 다자외교의 병행 추진을 통하여 한국과의 다층적인 우호관계 구축                  -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협력·평화발전 모델의 개발 및 추진</p>
<p>제4차원: 글로벌 차원 (global level)</p>	<p>○국제환경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global level)                  - 유엔 등 범세계적 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의 전개</p>

<표 5>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안보관계

남북한 관계의 진전	위협의 특징 및 양상과 안보관계
대치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현재적 위협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적화전전략의 지속적 추진</li> <li>- 무력도발 가능성 상존</li> </ul> </li> <li>○주변국가들의 부분적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li> </ul>
화해·협력 및 공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공존공생의 파트너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잠재적 군사적 위협 존재</li> <li>- 남북한 교류의 본격화</li> </ul> </li> <li>○남북한 신뢰관계의 조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안보대화의 전개</li> <li>- 공통의 안보 및 협력안보의 논의 및 실행</li> <li>- 군 인사교류</li> <li>- 군비통제 진척</li> </ul> </li> <li>○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 확대의 경쟁</li> </ul>
평화통일 지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잔존하는 가운데 남북한은 신뢰관계의 구축 및 평화조치의 구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안보대화의 제도화 및 적극적 추진</li> </ul> </li> <li>○불특정 안보 위협에 남북한 공통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립과 통일 저해세력의 등장</li> <li>- 남북한 공동안보 및 협력 안보에 관한 정책과제의 논의, 정책네트워크의 구축, 공동 정책개발</li> </ul> </li> </ul>

#### 다.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과 남북교류

포괄적 안보전략에 따른 남북교류의 전략적 활용은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남북간의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등은 상호이해를 제고시키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분단에 따른 이질성의 극소화와 더불어 민족공동체의 건설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안보대화의 촉진과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추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남북교류에는 역기능적 측면도 수반될 수 있다.

남북교류의 역기능적 측면은 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대북 관련 안보관 및 안보의식의 과도기적 혼란, ② 남북경협의 군사적 전용에 따른 남북관계의 갈등, ③ 전략물자의 군사적 전용에 따른 한국의 부담과 미국 등과의 갈등, ④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및 대북 투자 한국기업의 부진·좌절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심각한 부담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남북간의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교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남북간의 안보대화 및 평화조치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이중성 즉 ① ‘잠재적 위협의 존재’ 및 ② ‘포용대상으로서의 민족’ 가운데 ‘동일 민족’이라는 부분만이 감성적 차원에서 강조됨으로써 이성적 차원의 대북 안보관 및 안보의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대북 안

보역량이 약화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경제 지원물자 또는 투자가 북한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으로 전용될 경우, 남북관계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의 증폭과 더불어 대북 포용정책의 동요가 야기되면서 군사적 차원 및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즉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군사비 증대, 한국군의 대북 인식에 있어서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고, 비군사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한 불신의 증폭과 더불어 보수세력 및 야당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국론의 분열과 함께 통일역량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적절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논리에 치우친 한국기업들이 북한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제품경쟁력, 시장확보 등을 냉정하고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북 투자를 할 경우, 이는 거의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sup>34)</sup>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의 부진 또는 실패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열망의 좌절,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노선 대립의 심화 등 여타 분야까지 확산되어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상당한 차질을 초

34) 북한의 합영법이 1984년에 제정된 뒤, 김일성의 '2·28 교시'가 1986년에 발표되자, 조총련계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1987년부터 약 3년간 조총련계 상공인·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합영사업을 통한 대북한 투자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총련계 기업들이 합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조총련과의 조직적 관계에 따른 권유·강제·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자차원에서만도 아니며, 그 이상의 차원 즉 '자본의 논리 + 민족의 논리'에 의해 참가하였다. 그런데, 조·조합영사업의 실행에 관해 살펴보면, 정확한 파악은 정보량의 절대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대체로 북한의 합영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95년까지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합영회사 수는 약 131개이고, 1998년경에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 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투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래할 수 있으며, 아울러 통일역량을 극히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북교류는 포괄적 안보전략에 따라 남북교류의 순기능적 측면의 극대화와 역기능적 측면의 극소화를 지향하면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 IV.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추진전략

한반도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지향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역내의 불안정성·불확실성·유동성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역점에 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능동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포괄안보전략의 맥락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1.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Track 2 또는 Track 1.5 형태의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NEACD)가 있고, 한국이 주창한 '동북아 다자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가 Track 1 형태로 추진된 바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rack 2 형태의 '동북아 6자회담'이 논의·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주도아래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 공화국—이 참가하는 소위 '상하이 5개국회의'가 1996년 4월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후 상호신뢰구축 및

안보협력을 위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 지역은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아직 초보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역내국가들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 가. 동북아협력대화(NEACD)

NEACD는 1993년 3월의 북한의 NPT 탈퇴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긴장고조와 동년 7월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New Pacific Community' 구상발표를 계기로 동년 10월 미국 국무부의 지원아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분교의 '세계 분쟁 및 협력 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를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NEACD는 IGCC의 주도아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의 외교·안보 및 군사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참가하는 준정부기구의 협의체이다. 즉, 각국마다 외무부와 국방부를 대표하는 고위실무자 각 1명, 현역 군인 1명, 민간기관·두뇌집단·대학의 전문가 또는 학자 2명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이 NEACD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NEACD는 참가자의 실질적인 구성을 볼 때, 준정부 또는 반정부 기구로서 Track 1.5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35)</sup>

NEACD는 동북아국가들간의 상호신뢰와 보장의 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군사분야의 각종 조치들을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국한되지

35) 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안", 유재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 1999).

않은 ‘상호 재보장 조치’(Mutual Reassurance Measures: MRMs)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소 지역(sub-region)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 즉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NEACD는 북한을 참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1993년 7월의 준비회의에 유엔 주재 김종수 부대사를 참석시킨 이후, 계속 불참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9월 제5차 NEACD를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제10차 NEACD도 2000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였다.<sup>36)</sup>

#### 나. 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NEASeD)

NEASeD는 한국정부가 ARF와 기존의 역내 양자 안보동맹체제를 보완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우호적인 안보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ARF의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공식 제의한 것인데, 남북한·미·일·중·러 6개 국가의 참여, 다물 주요 의제 등 여러 면에서 NEACD와 유사하다.

그러나, NEASeD는 NEACD와 달리 협의의 진행과정 및 결과, 후속조치 등 여러 면에서 신뢰성을 제고·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의체인 Track 1을 지향하였다.

---

36) NEACD 제1차 회의(1993. 10, 미국 샌디에고), 제2차 회의(1994. 5, 동경), 제3차 회의(1995. 4, 모스크바), 제4차 회의(1996. 1, 북경), 제5차 회의(1996. 9, 서울), 제6차 회의(1997. 4, 뉴욕), 제7차 회의(1997. 12, 동경), 제8차 회의(1998. 11, 모스크바), 제9차 회의(1999. 12, 북경), 제10차 회의(2000. 11, 서울).

또, 김대중 정부는 출범직전인 1998년 2월 11일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을 제의하였는데, 현재 일본과 함께 남북한·미·일·중·러(몽골)<sup>37)</sup>이 참여하는 ‘동북아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6자회담’은 NEASeD와 내용상 거의 유사한 제안이다. 예컨대,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과 함께 동북아 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6자회담’이나 NEASeD는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과 북한의 반대로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

## 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

###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

II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듯이,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국제환경의 변화 즉,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경제력 비중의 증대에 따른 힘 개념의 변화,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호의존의 증대, 하이테크 전쟁의 도래와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의 제고 등에 따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안보환경의 전환기적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도 투영되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전환기적 변화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처하는 한 방안으로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한층 강하게 인식토록 하고 있다.

37) 1998년 10월 홍순영 당시의 외교부 장관은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오부치 일본총리의 6자회담을 지지하며, 6자 또는 몽골까지 포함하는 7자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도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데,<sup>38)</sup>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개와 더불어 유동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국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더불어 새로 조성될 동북아 안보환경 및 역학구도에서 자국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일 대 중국’의 느슨한 견제 구도속에서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동향은 유동성의 심화와 더불어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역할은 유동성의 증대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안보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된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역내 국가 상호간의 투

38) 정진위,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범문사, 1998).

39) 미·일은 신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의 NMD 구상에 반대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위한 정상회담을 가짐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과 경제협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은 동북아 국제정세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명성 및 신뢰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안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도 군사문제뿐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마약, 테러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안보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문제들은 국제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내 포괄적 안보문제들을 논의하고, 정책조정과 협력을 위한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필요성과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시대에 결성된 양자간 동맹만이 있다. 즉,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물론, 예방적인 다자안보협력 레짐도 없다. 그러므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예방외교의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역내 양자간 동맹관계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 즉 공동선(collective good)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기존의 동맹체제와 함께 역내 새로운 안보환경의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 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역할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개와 더불어 대치적 관계에서 화해·협력 및

40) 백진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광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평화공존관계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안보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존재도 현재적 위협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공존공생의 파트너로 발전시켜야 하는 민족사의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① 북한과의 신뢰관계 조성,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③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평화환경의 조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① 북한과의 양자간 차원에서는 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② 4자회담 등을 통하여 평화공존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추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③ 그와 같은 노력들이 원만하게 전개되도록 동북아 국제환경의 조성에도 전략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력과 관련,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직·간접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예방외교의 활동을 통하여 역내 불확실성을 감소·제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조건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과정의 평화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

41) 위의 글; 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안.”

### 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국 입장

#### 가. 미국

미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양자간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자국의 영향력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인식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반대했으나, 부시 행정부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지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즉, 1993년 3월에 클린턴 행정부의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하여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간 포럼을 발전시키는 것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10대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음을 밝혔고, 동년 7월에 클린턴 대통령은 ‘신태평양 공동체’의 근간으로 다자간 대화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동년 10월 동북아협력대화(NEACD)이 창설되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분교의 ‘세계 분쟁 및 협력 연구소’(IGCC)를 중심으로 NEACD를 주도하고 있고, 1994년 7월 25일에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인 ARF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도 유보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긍정적 지지로 전환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힘(power)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



간 안보협력을 통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미국은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담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NEACD의 Track 1에 대한 중국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NEACD를 Track 2로서 계속 운용시키려 하고 있다.

### 나. 일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과 관련, 일본은 초기에는 미·일 양자간 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 함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곧 미국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동북아 6자회담의 실현도 한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1991년 7월 나키야마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ASEAN-PM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를 하도록 하였고, 이어 1993년 1월 ‘미야자와 독트린’의 발표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94년 7월 ARF의 출범과 더불어 그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동남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NEACD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sup>42)</sup>

나아가, 일본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 직전에 발표된 한

---

42) NEACD의 제2차 회의(1994. 5) 및 제7차 회의(1997. 12)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국정부의 '동북아 6개국 선언'에 조응하여 동년 10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병행하는 형태의 '동북아 6자회담'을 제안하였고, 고노 외상을 통하여 1999년 10월의 한·일 각료회담 및 2000년 8월의 중·일 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은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 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지의 확보를 도모하려고 할 경우, 이는 한반도 차원의 4자회담과 동북아 지역차원의 6자회담을 분리·추진하려는 한국의 6자회담 구상과 배치되게 될 것이다.

요컨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6자회담에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43)</sup>

#### 다. 중국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이 구축되어 발전될 경우에 다루어지게 될 포괄적 주요 의제 즉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성 보장문제, 인권문제, 민주화, 환경문제 등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남사군도 및 타이완(臺灣)문제가 의제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타이완 주권에 관한 언급에 대해 내정간섭차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아울러 신장·

43)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티벳 문제, 종교의 자유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관계국간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주장하는 한편, NEACD나 ARF에 자국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수세적·소극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고, 아울러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넘어선 정치·안보문제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수립·제도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중국이 NEACD나 ARF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sup>44)</sup> ‘상하이 5개국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ARF 가입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체제의 출범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

요컨대, 북한이 동북아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될 경우, 중국도 소극적·유보적 태도에서 벗어나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45)</sup>

## 라. 러시아

구소련은 1960년대 말부터 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결성을 주장하였다. 즉 구소련은 1969년에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창한 후, 1985년에 ‘전아시아적 과정’(All-Asian Process)을 제시하였고,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연설에서 ‘전아시아 안보협력회의’(All-Asian Security & Cooperation Conference)을

44) 제4차(1996. 1), 제9차(1999. 12) NEACD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45) 2000년 7월 Yang Jiechi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구상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아울러 북한이 동 회담에 응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언급하였다.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구소련의 안보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엘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의 해소 및 위기관리를 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방지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1994년 4월 및 5월의 양국 국방장관 상호방문시에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하였으며, 1999년 한·러 정상회담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대화의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NEACD와 ARF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sup>46)</sup>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러시아는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와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동북아 6자회담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아울러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되고 있는 남북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현안인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4자회담에서의 소외 등 동북아 지역에서 상실된 자국의 영향력의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움직임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46) 제8차 NEACD는 1998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 마. 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이나 동북아 소지역 차원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과 관련, 북한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전아시아 안보협력회의’나 한국 노태우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1988. 10)의 창설 제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CSCE의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1992년 말 미국 베이커 국무장관의 ‘2+4 회의’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배전략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었으며, 나아가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47)</sup> 즉, 북한은 ① 6자회담이 주변 대국을 한반도에 끌어 들임으로써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히 지속시킬 수 있고, 아울러 ② 미·일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6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북한의 동참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 1993년 7월 NEACD 준비회의에 참가한 이후 불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의자료의 제공을 NEACD 사무국에 요청하고 있는 점과, 또 오스트레일리아(1994. 9)와 태국(1995. 7)을 통하여 ARF의 회원국 가입여부를 타진하다가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적극적 외교정책의 전개와 더불어 2000년 7월의 제7차 ARF에서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역내 분쟁의 사전예방을 추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47) 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향”; 1998년 10월 29일의 북한 중앙방송 논평 및 1999년 1월 9일의 북한 평양방송.

의 취지를 지지하여 동참하였기보다는, ARF 의장성명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4자회담, KEDO 지원,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핵 비확산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강화되고,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의제로 정착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sup>48)</sup> 반면, 북한의 NEACD에 보이는 관심이나 ARF에의 가입은 남북 화해·협력 관계의 성숙,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등 동북아 다자간 협력에 관한 조건만 성숙되면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전략

##### 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과 6자회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은 그 필요성으로 인하여 역내 관련국들의 정부간 수준 또는 민간수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국가들간 위협인식의 차이, 동질적 가치의 결여에 따른 다자간 협력 전통의 결여,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제도적 상호의존의 발달 미비, 미·일·중·러간의 경쟁심(Rivalry) 상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저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sup>49)</sup>

48) 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향.”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는 유동성의 심화와 더불어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북한 또한 2000년 7월 27일의 제7차 방콕 ARF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에서는 정치·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레짐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은 역내 국가들의 21세기의 주요한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남북한·미·일·중·러·몽골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주요 관련국가들의 입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동북아 6자회담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입장은 <표 6>과 같다.

---

49) 김태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 그 이상과 현실”, 『국제문제』 (2000. 4);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표 6> 동북아 6자회담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6개국(또는 7개국간)간의 안보분야 협력으로 추진</li> <li>○ 초국가적, 포괄적 안보문제(국제범죄, 테러, 마약, 환경 등)를 논의</li> <li>○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토대위에서 추진</li> <li>○ 4자회담과 분리·추진</li> <li>○ ARF와 협력·병행 발전</li> </ul>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양자적 안보협력(한·미, 미·일동맹 등)을 중요시하면서도, 역내 국가간 합의를 기초로 한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힘(power)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li> </ul> </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부치 총리가 1998년 10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6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희망 표시</li> <li>○ 동북아 6자회담에서 통하여 동북아 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도 논의하기를 희망</li> </ul>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넘어선 정치·안보문제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수립·제도화에는 소극적인 입장</li> <li>○ 동북아 6자회담에 북한이 응한다면, 참가한다는 입장</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와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동북아 6자회담을 적극 지지</li> <li>○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되고 있는 남북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li> </ul>
북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이 주변 강국들을 한반도에 끌어 들임으로써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히 지속시킬 수 있고,</li> <li>- 미·일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6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li> </ul> </li> </ul>



### 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추진방향과 6자회담의 추진전략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은 ① 정책집행을 위한 재정력과 ② 법적 구속력 등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지만, 역내 안보상황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의 OSCE의 경우에서 시사하듯이, 대화가 계속되는 한 심각한 분쟁도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동북아 지역에도 예방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이 필요한데,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간에 참가 범위, 의제범위, 레짐의 리더십, 레짐의 제도화 문제, 레짐의 주체 문제, 레짐과 주권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sup>50)</sup>

그리고, 한국은 ①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② 통일후에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의 불식 및 신뢰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현재, 한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하여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이를 위한 6자회담의 추진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50) 이원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제23집(1998);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1) 기존의 양자 동맹과의 상호보완적 전략

유럽에서는 양자간 동맹뿐 아니라 집단방위를 피하는 다자동맹인 NATO가 핵심적인 안전보장 장치로 기능하고 있고, 아울러 협력안보의 틀인 OSCE가 보완적인 안전보장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양자간 동맹체제만이 있고,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거부력 및 억지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손상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형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sup>51)</sup> 즉 한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이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도모하는 ‘안보대화 및 협의의 장’이 되어 역내 안보 갈등의 증폭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단계별·포괄적 접근전략

일반적으로 다자간 협력 레짐에 참여국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의사결정 구조는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의 기능은 저하될 수 있다. 즉 참여국의 수가 적절할 때, 다자간 협력 레짐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자간 레짐은 주권국가의 영역 및 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약소국가의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에 단계적이고

---

51) 양자간 동맹체제는 제3의 적을 염두에 둔 갈등체제이므로, 다자간 안보 협력 레짐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현실 즉, ‘미일 대 중국’을 축으로 한 잠재적 대결구도의 존재와 더불어 안보차원의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아울러 동북아 다자간 안보 레짐의 구축시에 초래될 수 있는 안보주권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6자회담을 ① 역내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포괄적 안보분야, ② 역내국가들간의 상호의존 및 상호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분야 등에 관한 ‘포괄적 대화체제’의 형태로 출발시키는 것이다.<sup>52)</sup>

포괄적 대화체제는 갈등의 증폭 및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역내 국가들의 주요 공통된 안보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안보정책 네트워크의 형성과 상호협력, 공통규범의 공유 등을 통하여 상호신뢰의 축적, 공동이익의 창출과 더불어 다자간 협력 레짐을 구축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은 포괄적 대화체제인 6자회담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안보대화의 제도화와 더불어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3) ‘Track 1’과 ‘Track 2’의 병행전략

동북아 지역은 상이한 국가제도와 문화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중적 접근은 효율성이 없고, 게다가 정치·군사면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며, 또 중국과 북한의 경우

52) 비군사적 분야는 군사적 분야보다 역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공동 관심사들 가운데 접근하기 쉬운 분야부터 전략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대화가 정부차원의 대화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는 정부간 채널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53)</sup> 즉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는 Track 1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rack 2인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와 Track 1인 ARF(ASEAN Regional Forum)의 상호보완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안보대화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Track 1과 Track 2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sup>54)</sup> 특히 중국의 경우, 다자간 안보 포럼의 참가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Track 2를 선호하고 있다. Track 2는 Track 1보다 훨씬 유연하고도 포괄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6자회담과 관련, 한국은 먼저 Track 2를 추진하여 여건이 성숙된 뒤 Track 1을 추진하는 유연한 병행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Track 2의 정책투입 기능을 높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Track 2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을 각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핵심 브레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4자회담과의 분리, 상호보완적 전략

4자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전략적이

53)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54) Kim Eun-seok,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South Korean Perspective,” *IFANS Review*, Vol. 7, No. 1 (July 1999).

고도 제한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회담’이다. 그런데, 협상회담에는 참여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이 복잡하게 되어 실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제고시키고 4자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 차원에서 ①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 별도로 평화협정의 협의를 진행하고, ② 그 결과를 4자회담의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진중에 있다.<sup>55)</sup> 즉, 한국정부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군축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4자회담의 운영틀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남북한 주도의 협상체제인 4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차원의 안보협력 대화체제인 6자회담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분리·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4자회담은 6자회담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4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전환되어서는 안되지만, 4자회담에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보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는 부문이 내포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중국과 남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가 공유하는 공동의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②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55) 한국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기존의 4자회담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4자회담의 운영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간 별도의 협의채널로 ① 4자회담의 2개 분과위원회인 ‘긴장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이 먼저 논의하는 방식과 ② 별도의 남북간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일보』 2000. 11. 28.

그러므로, 한국은 남북한이 주도하는 4자회담의 운영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4자회담과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동북아 6자회담의 추진을 전략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4자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4자회담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6자회담의 추진을 촉구하는 촉매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 지향은 남북한을 비롯한 4자회담 참여국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환경조성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5) 북한 참가 유도전략: 다각적 접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북한의 참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동북아 6자회담에 응할 경우, 중국도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6자회담에 북한이 응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북아 6자회담이 북한에게 ① 동북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하는 장을 제공해 주고, ②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sup>56)</sup>

즉, 한국은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의 전략적 활용과 더불어 북·미 및 북·일관계의 국교 정상화가 ‘북한의 개방·개혁’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추적 기능 수행’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

56)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국은 ARF나 NEACD의 참여국들의 정책 전문가들과 북한의 정책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및 북한의 발전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데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은 ARF나 NEACD의 참여국들 가운데 5~6개국 정도에서 구성되는 전문가 그룹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정책전문가들과 발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북한의 정책관련 고위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이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국제세미나 또는 국제포럼에 초청하는 전략적인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 론

### 1.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오늘날의 국가전략은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안보전략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국가전략은 개념 그 자체가 매우 다의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사전략 또는 안보전략과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역사의 전환기에서의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국가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한 국가가 전략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dynamic change)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design)이다”고 개념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전략의 구상 및 수립, 추진에 있어서는 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②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국가목표의 설정, ③ 국력 및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④ 한정된 가용자원을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에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⑤ 정치지도자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 및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 및 물적 환경에 대해 분석한 뒤,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 국가전략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국가목표에는 보편적인 공통성 이외에 민족모순의 극복이라는 특수성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한국의 국가전략은 물질 환경 및 국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극복, 번영과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즉,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치지도자이든,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까지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표 3>과 같이 다섯 차원으로 구성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국의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지향성을 가질 것이다.

첫째, 21세기를 주도하는 추동력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이므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에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분단모순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영을 통한 한민족의 도약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지전략적·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조건, 한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서 발전을 추구하여야 것이다.

## 2.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포괄적 안보전략

본서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치·목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익 및 국가목표를 추구해 가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민족모순의 해결과 더불어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는 데 위협요인 및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반도에 유리한 안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국의 힘을 증강시키는 자조노력,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국제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으로서 <표 4>와 같은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포괄적 안보전략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포괄적 안보전략에 따른 남북교류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 3.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추진전략

한반도가 ‘21세기 아시아의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지향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역내의 불안정성·불확실성·유동성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능동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포괄안보전략의 맥락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국가들간 위협인식의 차이, 동질적 가치의 결여에 따른 다자간 협력 전통의 결여,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

적·제도적 상호의존의 발달 미비, 미·일·중·러간의 경쟁심 상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저해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유동성의 심화와 더불어 ‘갈등·대립과 협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또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레짐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 6자회담에 대해서도 중국, 북한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표 6〉 참조)

그러므로, 한국은 ①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② 통일후에는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의 불식 및 신뢰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꾸준히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서에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및 6자회담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기존의 양자동맹과의 상호보완적 전략
- (2) 단계별·포괄적 전략
- (3) ‘Track 1’과 ‘Track 2’의 병행전략
- (4) 4자회담과의 분리 및 상호보완적 전략
- (5)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5.
- 김동성 외. 『新國家安保戰略의 模索』, 서울: 세경사, 1993.
- 김원배·권영섭·이영아. 『동북아경제와 한반도 개편 전략』, 안양: 국토연구원, 1998.
- 박영호·박종철. 『4자회담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투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_\_\_\_\_.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王允鍾·申東和·李炯根.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2000.
- 유재건 편저.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 1999.
-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임혁백·안석교 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나남출판, 2000.
- 정진영 편.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1995.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제36차 국내학술회의 논문집, 2000. 5. 30.
-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홍철·김원배.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안양: 국토연구원, 1999.
- 岡崎久彦. 「戰略的思考とは何か」. 東京: 中央公論社, 1983.
- 裴廷鎬. 「國際環境の變化と日本の對應 - 大平政權から中曾根政權までにおける日本の総合安全保障と國家戰略 -」. 東京大學 博士學位 論文, 1991.
- 山本吉宣. 「國際的相互依存」.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伊藤憲一. 「國家と戰略」. 東京: 中央公論社, 1985.
- 西原正. 「戰略研究の視覺」. 東京: 人間の科學社, 1988.
- 佐藤徳太郎. 「大陸國家と海洋國家の戰略」. 東京: 原書房, 1973.
- 猪口邦子. 「戰爭と平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猪口孝. 「國家と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Carr, Edward Hallet.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The Macmillan & Co. Ltd., 1939.
-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Earle, Edward Mead.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N.J., 1943.
- Ken Booth and Russell Trood. ed. *Strategic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9.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Frankel, Joseph. *Contemporary International Theory and Behavior of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1973.
- Hart, Basil H. Liddel. *Strategy*. New York: Signet, 1974.

- Lippmann, W. and C. V. Crabb, Jr.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Nuclear Age*.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 Luttwak, Edward N.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87.
- Peter J. Katzenstein.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The Post Cold War World*, Shanghai: SIIS Publication, 2000.
- Strategy and Force Planning Faculty,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2000.
- Velschera, Heinz. *Instrument of Cooperative security in the CSCE Framework-Confidence Building Measures, Emergency and Conflict Prevention*. Vienna: CSCE Secretariat, 1994.

## 2. 논문

-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1994 봄·여름).
-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1호 (1994).
-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김태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 그 이상과 현실.” 『국제문제』 (2000. 4).
- 문수언 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국

- 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
- 배정호. “국가전략과 과학기술력.” 『戰略研究』 第4輯 (1995.12)
- 백진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곽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세종연구소. “제1장 21세기를 향한 국가전략.”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엄태암. “동북아 6자회담의 실효적 추진방안.” 유재건 편.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 1999.
- 이원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 통제』, 제23집 (1998).
-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 (1995 봄·여름)
- 임혁백. “21세기 아시아 중추국가의 비전.” 통일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발표 논문, 2000. 9. 5.
- 홍기준. “안보레짐의 형성: CSCE/DSCE의 사례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8집 1호. 1998.
- Kim, Eun-seok.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South Korean perspective.” *IFANS Review*, Vol. 7, No. 1 (July 1999).
- Murakami, Yasusuke. “The Japanese Model of Political Economy.” Kozo Yamamura & Yasukichi Yasuba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87.
-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July 17, 1992).

### 3. 기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방송」.

「한계레신문」.

「한국일보」.

「평양방송」.

「每日新聞」.

「産經新聞」.

「朝日新聞」.